

ASAN REPORT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2년 5월



Asan Report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2022년 5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제임스 김

제임스 김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지역연구센터 센터장(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Columbia University 국제대학원 겸임 강사이다. Cornell University에서 노사관계 학사와 석사학위를 마치고 Columbia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California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Pomona의 조교수(2008~2012)와 랜드 연구소의 Summer 연구원(2003~2004)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민주주의 제도, 무역, 방법론, 공공정책 등이다.

강충구

강충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연구 관심 분야는 양적연구방법, 조사설계, 통계자료 분석 등이다.

함건희

함건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고려대학교 정보수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연구 관심 분야는 혼합모형, 불완전 자료 분석, 방법론 등이다.

목차

요약	06
1. 들어가며	10
2. 대미(對美) 인식	11
2.1. 미국 이미지	11
2.2. 미국 호감도	15
3. 한미동맹	19
3.1. 한미동맹의 역할	19
3.2. 한미동맹의 필요성	24
3.3. 주한미군의 필요성	25
3.4. 핵무기에 대한 의견: 핵개발, 전술핵 배치	29
4. 한미관계의 미래	35
4.1. 한미관계 주요 현안	35
4.2. 한미관계 이슈	36
4.3. 한미관계 전망	42
5. 나가며	45
조사방법	48
부록 1: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 한미관계 조사	52
부록 2: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 주변국 인식 조사	58

그림

[그림 1] 미국 이미지	12
[그림 2] 한미관계 중요 사건	14
[그림 3] 미국 호감도	16
[그림 4] 한미동맹의 역할	20
[그림 5] 시기별 북한의 무력도발	21
[그림 6] 한미동맹의 필요성: 향후 vs. 통일 후	24
[그림 7] 주한미군의 필요성: 향후 vs. 통일 후	26
[그림 8] 향후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의견	28
[그림 9]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견	31
[그림 10]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의견	34
[그림 11] 한미관계 주요 현안	36
[그림 12]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견	37
[그림 13] 한미관계 이슈에 대한 의견	41
[그림 14] 한미관계 전망	42

표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호감도: 미국 vs. 바이든 대통령	18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미동맹 역할 인식	22
[표 3] 한반도 전쟁에 대한 미국의 대응	23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한미군의 필요성	27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견: 제재 가능성 언급 여부	33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미관계 전망	43

요약

본원은 2022년 3월 대미(對美) 인식, 한미관계, 동맹 등에 대한 국내 여론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수교 140주년이 된 한미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3월 한미관계 조사를 중심으로 과거 자료를 이용해 시기별 여론 변화도 검토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조사의 주요 결과다.

- ‘미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막강한 군사력을 꼽은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다. 2015년에는 자본주의 경제, 막강한 군사력을 꼽은 비율이 각각 28.6%, 26.7%로 비슷했던 것과 달리, 2022년 군사력을 꼽은 응답은 2015년 대비 10.6%p 증가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한 답은 각각 31.4%, 17.2%로 2015년(자본주의 28.6%, 민주주의 20.6%) 대비 차이가 없었다.
- 한미관계에 있어 중요 사건을 물었을 때는 안보 이슈(6.25 전쟁 35.8%, 한미동맹 체결 23.3%)를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전쟁, 남북분단, 동맹 체결 등으로 군사, 안보가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인은 한미관계에서 긍정 사건을 더 많이 떠올렸다. 한미동맹 체결 23.3%, 한미 FTA 체결 12.6%, 한반도 해방 10.1% 등 긍정 사건을 꼽은 비율은 1945년 남북분단 13.6%, 2008년 광우병 사태 3.6% 등 부정 사건을 택한 답보다 높았다.
- 한국인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였다(0점=전혀 호감 없음 ~ 10점=매우 호감 있음). 미국 호감도는 2020년 7월(4.52점)을 제외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도 5점(중립) 이상을 유지했다. 2020년 7월을 제외하면 미국 호감도는 최저 5.45점, 최고 6.85점으로 중립, 호감 범위에 있었다. 미국 호감도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호감도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인 2020년 12월 5.99점으로 반등했고, 2022년 3월에는 6.85점까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 한미동맹의 역할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2016년 51.2%, 2020년 66.3%, 2022년

60.2%). 미국,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 인식이 향후 양국 간 동맹을 가치 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는 신뢰가 높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인지 물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 시기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갈등이 불거진 때를 제외하면 2014년 이래 80% 후반, 또는 그 이상이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것(2019년 84.7%, 2020년 86.6%, 2022년 88.9%)이라고 봤다.
- 한국인은 한미동맹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이래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90%대(최저 91.9%, 최고 96.4%)였고, 통일 후에도 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80%대(최저 80%, 최고 86.3%)였다. 북한 변수를 고려해 동맹의 필요성을 달리 본 비율은 10%p 내외였다. 안보불안 요인인 북한을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답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 주한미군이 향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동맹이 필요하다는 답에 비해 적었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2년(67.8%)을 제외하면 모두 80% 내외였다(최저 72%, 최고 82.1%).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4년 36.1%에서 2022년 62.3%로 증가세를 보였다. 35.1%로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을 제외하면, 2018년 49.5%, 2019년 44.1%, 2020년 46.3%였다. 그만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더불어, 향후와 통일 후를 가정한 응답 격차는 2014년 44.2%p에서 2022년 19.8%p로 줄었다. 이는 북한 위협 등을 포함한 정세 변화로 역내 질서가 불안정해지면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서였다.
- 향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주한미군의 규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69.8%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이 비교적 낮았던 2019년, 2020년에는 주한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6.7%, 23.8%였다(2022년 15.5%). 주한미군을 늘려야 한다는 답은 2019년 7.8%, 2020년 10.4%, 2022년 12.3%로 큰 차이가 없었다.
- 한국인은 2010년 이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대체로 지지(최저 2018년 54.8%, 최고

2022년 70.2%)했다. 주목할 점은 찬성, 반대 사이 차이가 점차 늘었다는 것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반전됐던 때를 제외하면, 찬반 의견차는 2010년대 20%p 내외에서 2019년 이후 30~40%p로 벌어졌다. 2019년 34.2%p(찬 67.1%, 반 32.9%), 2020년 38.6%p(찬 69.3%, 반 30.7%), 2022년 42%p(찬 70.2%, 반 28.2%)로 격차가 커진 것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닫힌 탓으로 보인다.

- 독자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유보층(모름·무응답)을 제외한 분석에선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 비율은 65%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71.3%)에 비해 6.3%p 감소했다(유보층 포함, 제재 가능성 무(無)언급 70.2% → 제재 가능성 언급 63.6%= 6.6%p).
- 한국인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에도 59%가 찬성했다(반대 38.3%). 2019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래 찬성 비율은 반대보다 최저 20.7%p(2022년), 최고 38.2%p(2013년) 더 높았다. 2019년, 유일하게 전술핵무기 배치에 의견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북미정상회담 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바뀐 탓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북핵 위협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면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 비율이 2017년 대비 9.7%p 늘었다(2017년 38.2% → 2019년 47.9%).
- 한국인은 한미관계 현안에 현실적 답을 했다. 고조된 북한 핵 위협으로 북핵 위협 대처 등 안보 협력을 꼽은 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 대화의 창이 닫히고, 2022년 들어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영향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는 ‘무역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16.1%,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14.3%,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12.6%,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등 동맹 운영’ 10%였다.
- 정부의 연합훈련 계획과 별개로, 한미연합훈련 추진 방향을 물었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그 규모를 되돌려야 한다는 답이 46.4%로 절반에 가까웠고, 축소·중단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35.8%로 다음이었다.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차가 있었다. 보수는 54.9%가 기존 규모로 되돌려야 한다고 한 반면, 이에 동의한 진보는 35%였다(중도 48.9%). 반대로 진보는 51.7%가 축소·중단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으나, 보수는 22.1%만 같은 답을 했다(중도 37%). 또 보수는 20.2%

가 연합훈련을 과거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진보 5.7%).

- 쿼드(Quad)에는 불참 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를 고려해 반중(反中) 전선 합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역대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쿼드 참여에 긍정 입장을 보인 비율은 86.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쿼드에 긍정적이었다(부정 10.1%).
-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83%였다(부정 15.9%).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지한 답이 80%를 넘은 데에는 높아진 역대 불안정성 탓도 있다. 한국인 대다수는 북핵 위협,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 한국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에도 71.7%가 동의했다(반대 22.8%). 미사일방어체계 참여는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보수는 84.7%가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 반면, 진보는 56.2%만 이에 동의했다(중도 70.1%). 물론 진보에서 절반 이상이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공감한 점은 유의할 점이다.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진보 38.5%, 보수 12%였다(중도 24%).
- 사드(THAAD) 추가 배치에는 57.7%가 찬성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38.9%로 상당했다. 앞서 살펴본 쿼드·한미일 협력·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비해 사드 추가 배치에는 일부가 찬성(긍정)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갈등으로 큰 홍역을 치렀고,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제 피해를 본 기억이 뚜렷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2013년부터 실시한 네 차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트럼프 당선 후를 제외한 모두에서 한미관계 낙관론(2013년 75.1%, 2020년 74.7%, 2022년 88.3%)이 비관론을 압도했다. 바이든 당선 직후인 2020년 12월,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답은 오바마 정부 때와 비슷했고, 2022년 3월에는 그보다 더 높았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한미관계를 낙관했다. 그만큼 한국인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

1. 들어가며

2022년은 서울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조미수호통상조약(1882년)을 체결한 지 140년이 되는 해이다. 19세기 중반 제너럴셔먼호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미관계는 1945년 한반도 해방 및 남북분단, 6.25 전쟁(1950~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미국의 원조,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채워져 왔다.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는 한미동맹은 정전 협정을 체결한 1953년에 시작됐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한 양국 동맹의 기초가 됐다.

한국은 미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식한 국가 중 가장 성공적 사례다. 그간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가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남북관계, 대북관여,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 안보뿐 아니라, 한미 FTA,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왔다. 근래 한미동맹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하면서 역내, 국제사회 내 한국의 역할은 더 커졌다.

냉전체제는 붕괴됐지만 최근엔 중국의 부상, 북한 핵 개발로 한미동맹은 더 중요해졌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한때 논란이 됐던 한미연합훈련 축소,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감축, 전시작전권 전환 등은 한미 양국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또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역할 확대를 요구하면서 한미동맹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쿼드(Quad, 이하 '쿼드'), 한미일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은 그 예다.

이 보고서는 미국, 한미관계, 동맹 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검토했다. 과거 조사자료를 이용해 시기별 대미 여론을 분석하고, 향후 한미관계 전망을 살펴봤다. 또 지난 20대 대선에서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만큼 현시점의 대미 여론이 새 정부의 대외 정책에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본원의 2022년 3월 한미관계 조사를 중심으로 미국,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봤다. 시기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본원과 타 연구기관의 비교 가능한 과거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한국인의 대미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미국 이미지, 호감도와 같은 기본 인식뿐 아니라, 한미동맹, 주한미군, 독자 핵무장 및 전술핵무기 배치, 쿼드, 한미일 협력,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체계 및 사드(THAAD, 이하 '사드') 추가 배치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2. 대미(對美) 인식

한국인은 대체로 주변국 중 미국에 우호적 인식을 보여왔다. 그러나 대미(對美) 정서는 한 때 미국, 주한미군 관련 이슈나 사건으로 인해 악화되기도 했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은 바로 그 예다. 이외에도 대미 여론은 1990년대 주한미군 범죄, 2003년 이라크전 파병,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으로 나빠졌다. 이처럼 대미 정서는 미국, 주한미군 관련 논란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요동쳤다.

한국인의 반미(反美)는 특정 이슈(사건)에 대한 반응이란 점에서 반미주의와 다르다. 2010년대 이후 대미 여론은 미국의 공공외교로 관리가 잘 됐고, 최근에는 반중(反中) 정서 확산으로 반사이익을 얻었다. 본원은 2010년부터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호감도(favorability, 0~10점)를 반복 조사해왔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2010년 이후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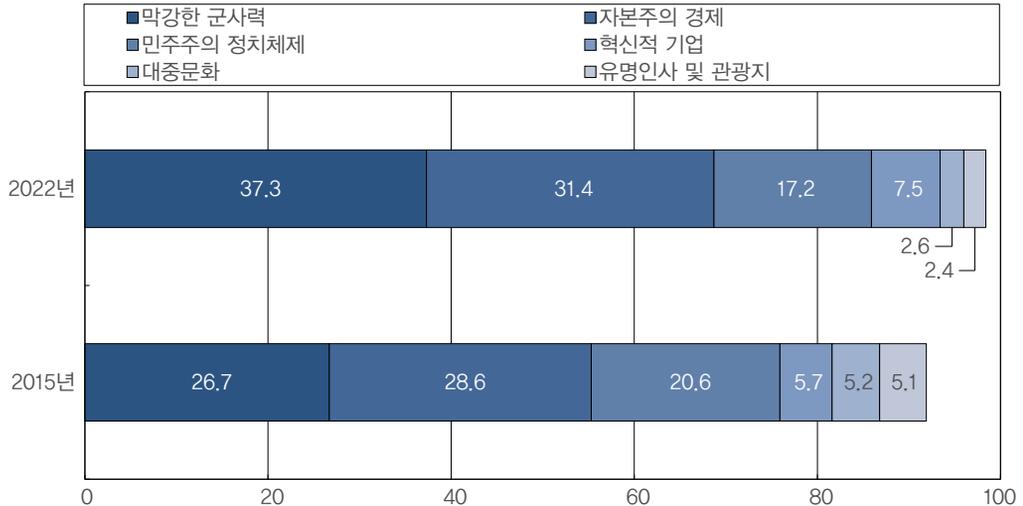
2010년 이래 한국인의 대미(對美) 호감은 다른 주변국에 비해 꾸준히 높았다. 이는 미(美) 행정부가 정권 교체로 바뀐 상황에서도 동일했다. 다른 주변국 인식이 긍정, 부정을 오가거나 부정에 머물렀던 것과는 대조된다. 한국인은 한미관계가 불협화음을 냈던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미국에는 높은 호감을 보였다. 이후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관계에는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

다음에서는 ‘전통 우방’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봤다. 먼저 한미관계와 별개로 미국 이미지, 호감도 등을 분석했다.

2.1. 미국 이미지

한미관계 인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인이 평소 미국에 갖고 있는 인상을 살펴봤다. 문항은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응답이 편향되지 않도록 특정 이슈를 언급하지 않고, 미국과 가장 가깝게 연관 짓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측정했다. 응답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체제’, ‘혁신적 기업’, ‘대중문화’, ‘유명인사 및 관광지’로 구성했다.

[그림 1] 미국 이미지' (%)



본원의 2015년 조사자료를 이용해 미국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검토했다. 두 차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막강한 군사력', '자본주의 경제'와 연관 지은 답이 과반을 넘었다(그림 1). 전반적으로 한국인은 미국을 군사, 경제 등 하드파워와 연관 지었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전 세계에 정치,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2022년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라고 했을 때, 막강한 군사력을 꼽은 비율이 37.3%나 됐다는 것이다. 2015년에는 자본주의 경제 28.6%, 막강한 군사력 26.7%로 비슷했던 것과 달리, 2022년 군사력을 꼽은 비율은 2015년 대비 10.6%p 늘었다. 이는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가 크고, 군사력도 워낙 막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력 지수(Military Strength Index)를 보더라도 미국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수위를 지켜왔다.² 또 2020년대에 들어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 전반에서 군사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1. 출처: 아산폴(2015년 3월, 2022년 3월(한미관계)). 미국 이미지 문항은 본원의 2014년 조사의 개방형 문항(open question) 응답 결과(3월 19~21일)를 고려해 응답지(response option)를 구성했다.
2. 한국인이 미국을 '막강한 군사력'과 연관 지은 경향은 임의적이지 않았다. 2022년 국방력 지수에 따르면 미국이 1위였고, 다음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순이었다. 출처: Military Strength Ranking 2005~2022, Global Firepower(GFP). <https://www.globalfirepower.com/global-ranks-previous.php>.

경제, 민주주의 정치체제라고 한 답은 각각 31.4%, 17.2%로 2015년 대비 차이가 없었다(자본주의 28.6%, 민주주의 20.6%).

이와 달리 미국을 대표하는 혁신 기업(2015년 5.7%, 2022년 7.5%), 대중문화(2015년 5.2%, 2022년 2.6%), 유명 인사·관광지(2015년 5.1%, 2022년 2.4%) 등을 미국과 연관 지은 비율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15% 내외였다. ‘미국’ 하면 하드파워를 떠올린 한국인이 다수였다고 해도, 미국을 소프트파워와 연관 지은 응답이 15%대에 그친 점은 주목할 만하다.³

다음은 한미관계로 범위를 한정해 중요 사건이 무엇인지 물었다(그림 2). 응답자는 한미관계에 있어 중요 사건을 ‘6.25 전쟁’, ‘한미동맹 체결’, ‘한미 FTA 체결’, ‘1945년 남북분단’, ‘한반도 해방’, ‘2008년 광우병 사태’ 중에서 골랐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순으로 두 가지를 답했는데, 이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1순위로 안보 이슈를 꼽은 비율(6.25 전쟁 35.8%, 한미동맹 체결 23.3%)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전쟁, 남북분단, 동맹 체결 등으로 군사, 안보가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향은 2순위 사건을 고른 결과를 합해 범주형 다중응답 분석을 했을 때도 동일했다. 1, 2순위 응답을 합한 결과에서도 6.25 전쟁, 한미동맹 체결이라고 한 비율은 각각 56.6%, 47.3%나 됐다.

다음으로는 한미 FTA 체결이 31.2%, 1945년 남북분단과 한반도 해방이라고 한 비율이 각각 26.5%, 23.3%로 나타났다(1, 2순위 통합). 여기서 1945년 전후(戰後) 상황 인식이 비슷하게 해방과 분단으로 나뉜 점은 흥미롭다. 전후 인식에 대한 보수, 진보 진영 간 시각차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 사건인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꼽은 비율은 8.4%로 소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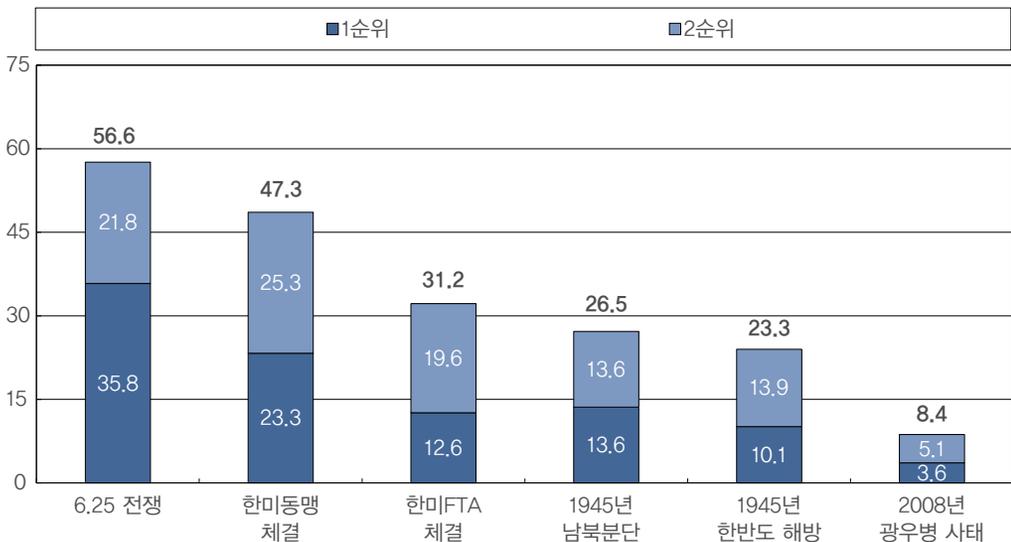
둘째, 한국인은 한미관계에서 긍정 사건을 더 많이 떠올렸다. 1순위 응답을 보면, 중요 사건으로 한미동맹 체결(23.3%), 한미 FTA 체결(12.6%), 한반도 해방(10.1%)을 꼽았다. 이와 달리 부정 사건인 1945년 남북분단, 2008년 광우병 사태는 각각 13.6%, 3.6%에 불과했다. 이는 1, 2순위 응답을 통합한 결과에서도 동일했다(한미동맹 체결 47.3%, 한미 FTA

3. 미국 이미지가 안보, 경제에 집중된 탓에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체결 31.2%, 한반도 해방 23.3% vs. 남북분단 26.5%, 광우병 사태 8.4%).

이 문항에 6.25 전쟁이라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6.25 전쟁은 긍정, 부정 중 어느 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응답자의 역사 인식에 따라 전쟁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서다.⁴ 이념성향별 분석에서 보수, 진보 모두가 ‘미국’을 6.25 전쟁과 연관 지은 비율이 높았던 것(1순위 보수 33.3%, 진보 32.5%)도 6.25 전쟁을 긍정, 부정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림 2] 한미관계 중요 사건⁵ (%)



6.25 전쟁을 제외하면 한미관계 역사 인식은 이념성향별로 달랐다. 1순위 응답을 보면 보수는 한미동맹 체결(28.2%)을 중요하다고 한 반면, 진보는 남북분단(22.7%)이라고 했다.

4.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6.25 전쟁에는 미국이 북한의 남침 공산화 계획을 저지했다는 점, 전후(戰後) 원조로 남한이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점과 전쟁에 냉전기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성격이 있었다는 점, 한반도 전쟁으로 한국이 가장 큰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각 등이 공존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6.25 전쟁을 중요 사건으로 꼽은 응답자가 이 중 어느 면에 기초해 답했는지 알 수 없다.
5. 출처: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그림 2]의 그래프 상단 값은 1, 2순위 응답을 이용한 다중응답 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 결과다. 1, 2순위 응답의 단순합계와는 다르다.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므로 1, 2순위 응답을 합해 분석했다. ‘한미 FTA 체결’을 제외하면 1, 2순위 응답의 순서는 동일했다.

1, 2순위 답을 합했을 때도 보수는 한미동맹 체결(57.8%)을 중요 사건으로 봤고, 한반도 해방(27.4%), 한미 FTA 체결(25.4%)은 그 다음이었다. 반면, 진보는 중요 사건으로 남북 분단(38%), 한미 FTA 체결(37.3%), 한미동맹 체결(35.1%)을 꼽았다(6.25 전쟁 1, 2순위 통합: 보수 55.2%, 진보 54.8%).⁶

이념성향은 연령과 관련 있기에 이 경향은 연령대별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1, 2순위 답을 합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65.3%가 6.25 전쟁을 중요 사건으로 꼽았다. 이는 고령층인 이들이 전쟁과 시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연령대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체결은 20대(53.5%), 30대(49.9%)에서 높았고, 한미 FTA 체결은 40대 39.5%, 30대 38%의 순이었다. 남북분단을 꼽은 비율은 50대 32.9%, 40대 29.7%의 순으로 높았다. 한미관계 역사 인식이 이념성향, 연령대에 따라 달랐다는 점은 맞춤형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높이는 공공외교에 갖는 함의가 크다.

2.2. 미국 호감도⁷

한국인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였다. 미국 호감도(0점=전혀 호감 없음 ~ 10점=매우 호감 있음)는 2020년 7월(4.52점)을 제외하면, 거래적 동맹관으로 한국을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 때도 5점(중립) 이상이었다(그림 3). 2020년 7월을 제외하면 미국 호감도는 최저 5.45점(2019년 8월), 최고 6.85점(2022년 3월)으로 중립에서 호감 범위에 있었다. 미국 호감도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호감도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인 2020년 12월 5.99점으로 반등했고, 2022년 3월에는 6.85점까지 상승했다는 점이다.

미국 호감도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같은 기간 중국 호감도는 최저 2.40점(2020년 7월), 최고 4.16점(2018년 6월)으로 중립(5점) 이하에 머물렀다. 중국 호감도는 2020년 12월 3.25점으로 반등하는 듯했으나, 2022년 3월 다시 2.71점으로 하락했다. 2018년 이래 중국 호감도가 3점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19') 발원지 논쟁, 김치 등 한국 문화 왜곡 등으로 근래 확산된 반중(反中) 정서가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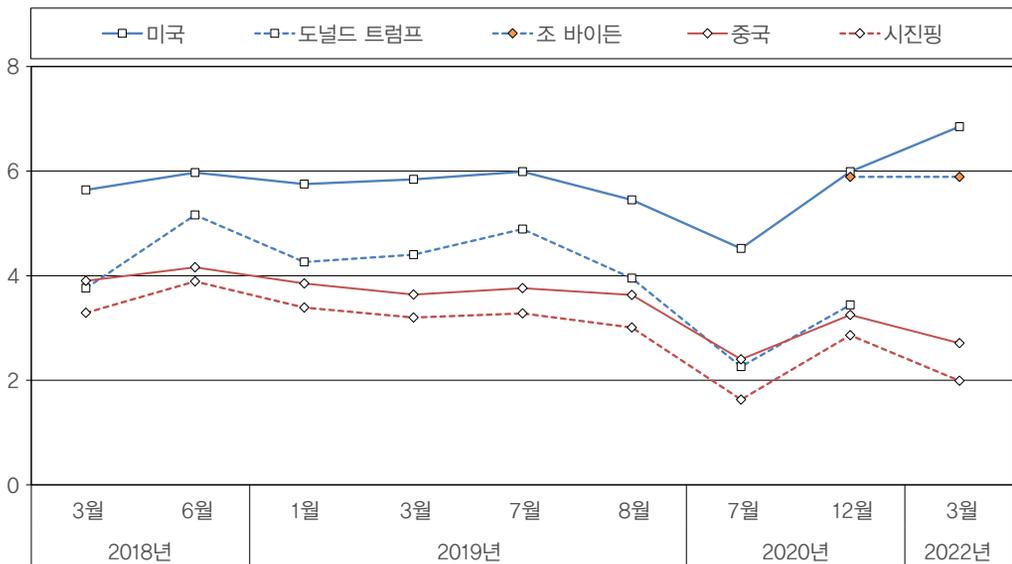
6. 중도는 6.25 전쟁(60%), 한미동맹 체결(47%), 한미 FTA 체결(34.3%), 남북분단(24%), 한반도 해방(21.7%)의 순으로 답했다(1, 2순위 통합).

7. 본원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에 대한 호감도(0~10점)를 반복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인의 대미(對美) 인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미국과 비교 대상인 중국에 대한 조사결과만 본문에서 다뤘다.

감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 호감도는 최저 1.63점(2020년 7월), 최고 3.89점(2018년 6월)으로 중국 호감도보다 낮은 비호감 범위에 머물렀다.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2020년 12월, 2022년 3월 모두 5.89점을 기록했다. 2020년 대통령 당선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6점에 가까운 호감도를 유지했다. 이는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록했던 5.16점(2018년 6월)보다 0.73점가량 더 높다. 여기에는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미국 호감도⁸ (0~10점)



대체로 주변국과 각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는 상관관계에 있다. 예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호감도는 미국 호감도와 다른 추이를 보였다. 4~5점대에서 움직인 미국 호감도에 비해 트럼프 호감도는 최저 2.26점, 최고 5.16점으로 비교적 큰 등락을 보였다. 이와 달리 중

8. 출처: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본문의 [그림 3]과 [그림 4]는 본원의 이슈브리프 “South Korean Outlook on the United States and ROK-U.S. Relations in the Biden Era (2021)”의 Figure 1과 Figure 5에 2022년 3월 조사자료를 추가한 결과다(<https://www.asaninst.org/contents/south-korean-outlook-on-the-united-states-and-rok-u-s-relations-in-the-biden-era/>).

국과 시진핑 주석 호감도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추이가 매우 유사했다($r=0.99$). 미국과 미 대통령 호감도의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연령대,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났다(표 1). 연령대가 높을수록(50대: 미국 6.80점, 바이든 6.04점, 60세 이상: 미국 7.34점, 바이든 6.76점), 이념성향이 보수일수록(미국 7.83점, 바이든 6.63점)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더 높은 호감을 보였다. 연령대에 비해 이념성향별 호감도 차이가 더 컸다. 진보, 중도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각각 5~6점 초반 호감을 보인 반면에 보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각각 7.83점, 6.63점 호감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미(美) 대통령 호감도는 미국 호감도에 근접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1점에 가까운 차이(0.96점)를 보였다.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격차는 연령대로는 40대 이하, 이념성향은 보수, 중도에서 더 컸다. 두 호감도가 크게 차이 난 연령대는 20대(미국 6.35점, 바이든 5.05점=1.30), 30대(미국 6.73점, 바이든 5.46점=1.27)로 1점 이상 차이가 났다(40대: 미국 6.63점, 바이든 5.44점=1.19). 미국 호감도가 6점대인 것에 비해 바이든 호감도가 5점 중반을 넘지 못하면서 차이가 났다. 50대와 60세 이상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가 그 차이가 1점 이내로 비교적 적었다.

이념성향에 따른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차이는 보수에서 가장 컸다. 연령대별 분석과 달리, 이념성향은 6~7점대 높은 호감을 보인 보수층에서 격차가 1.20점으로 더 크게 났다(미국 7.83점, 바이든 6.63점). 진보는 미국 5.81점, 바이든 대통령 5.26점으로 그 차이가 0.55점으로, 보수층 내 호감도 격차에 미치지 못했다(중도: 미국 6.31점, 바이든 5.38점=0.93점).

2020년 바이든 당선 후 미국 호감도가 6점 전후를 기록했고,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도 동반 상승해 2022년 5점 후반이 된 점은 고무적이다. 한미 양국이 동맹 강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동맹 강화를 강조한 만큼 호감도 등 대미 인식 제고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요 파트너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이 높을수록 대미 정책에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호감도: 미국 vs. 바이든 대통령⁹ (0~10점)

	미국(a)	바이든(b)	차이(a-b)	
전체	6.85	5.89	0.96	
연령대	20대	5.05	<u>1.30</u>	
	30대	5.46	<u>1.27</u>	
	40대	5.44	<u>1.19</u>	
	50대	<u>6.80</u>	<u>6.04</u>	0.76
	60세 이상	<u>7.34</u>	<u>6.76</u>	0.58
검정값	$F=5.467, df=4, p<.001$	$F=17.479, df=4, p<.001$		
이념 성향	보수	<u>7.83</u>	<u>6.63</u>	<u>1.20</u>
	중도	6.31	5.38	<u>0.93</u>
	진보	5.81	5.26	0.55
검정값	$F=75.032, df=2, p<.001$	$F=34.365, df=2, p<.001$		

9. 출처: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3. 한미동맹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동맹국이 됐다. 냉전 시대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구축된 양국의 동맹은 한국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의 일부를 책임지면서 한국의 압축성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 한국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식한 대표적 사례로 지난 70년간 양국 관계는 더 공고해졌다.

이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를 넘어 역내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부상했다. 다음에선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관계로 발전한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했다. 안보동맹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 한미동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봤다.

3.1. 한미동맹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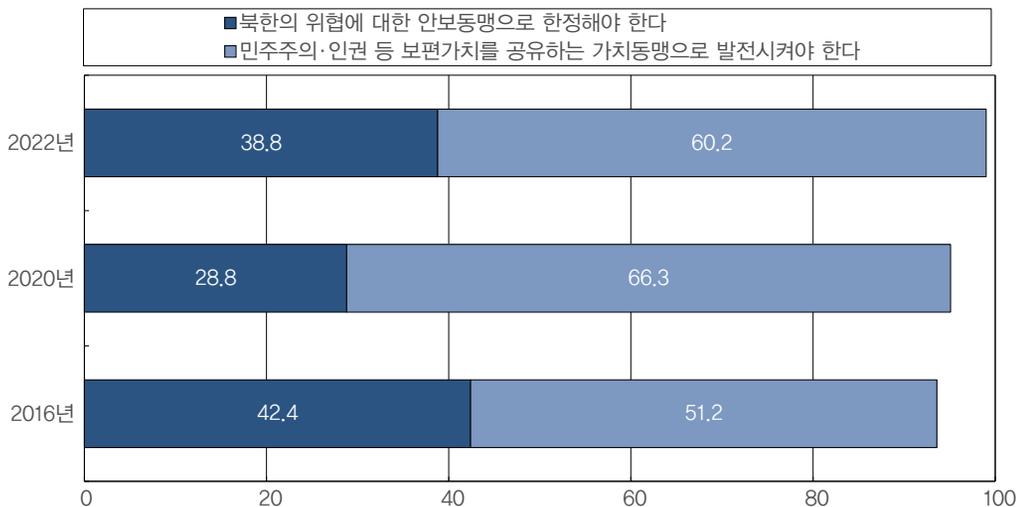
한미관계에서 동맹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미 양국은 2009년 공동미래비전선언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안보 이외에 우주, 에너지, 보건, 경제 양극화, 인권, 민주주의, 기후변화 등으로 확장할 것을 공언했다. 이후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보건, 공급망, 우주,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인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의 역할 확장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다음에선 한미동맹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의 역할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동맹으로 한정해야 할지 아니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할지를 물었다.

본원의 과거 조사자료(2016년, 2020년)를 이용해 시기별로 한미동맹 역할 인식이 바뀌었는지도 분석했다(그림 4). 한미동맹 역할에는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2016년 51.2%, 2020년 66.3%, 2022년 60.2%). 안보동맹에서 시작된 한미동맹이 앞으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 인식이 향후 양국 간 동맹을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2016년을 제외한 두 차례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안보동맹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답도 2년 사이 10%p 늘었다. 후자는 비교적 단기 변화라는 점, 수치가 2016년 수준(42.4%)으로 회귀했다는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 이는 북미 비핵화 대화가 사실상 결렬됐고, 2022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의 역할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의 의미가 한국인에게 일시적으로 더 중요해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림 4] 한미동맹의 역할¹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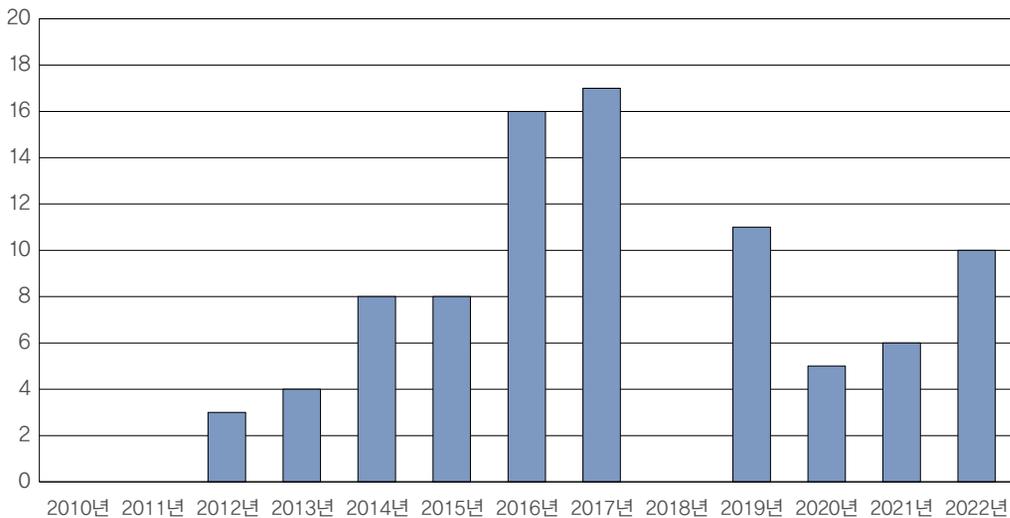


북한의 도발은 2022년 들어 크게 늘었다(그림 5). 2022년 3월, 북한은 이미 10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2021년에 6회로 도발 횟수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 수치는 2019년 도발 빈도인 11회에 근접한 것이다. 또 북한이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도발을 한 2016년(16회), 2017년(17회)보다는 적었지만, 3월까지 집계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 북한의 도발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미국과 장기적 대결을 예고한 만큼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 출처: 아산폴(2016년 11월, 2020년 12월, 2022년 3월(한미관계)). '모름·무응답'은 2016년 6.4%, 2020년 4.9%에서 2022년 1.1%로 감소했다. 이를 보면 한미동맹 역할에 특정 의견을 내지 않았던 응답층이 최근 늘어난 북한의 도발을 보면서 안보동맹을 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한국인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동맹의 역할을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과 2022년, 북한의 도발로 안보에 위협을 느낀 응답자는 동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북한의 도발 → 위협 지각 → 미국의 안보 보장 역할). 반면, 도발이 적었던 2020년에는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가치동맹으로 확장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6년간 동맹의 북핵 대응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2016년 42.4% → 2020년 28.8% → 2022년 38.8%)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2016년 16회에서 2020년 5회로 줄었다가 2022년 다시 10회 이상으로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림 5] 시기별 북한의 무력도발¹¹⁾ (회)



앞서 살펴본 한국인의 한미동맹 역할 인식은 연령대별로 달랐다(표 2). 2020년, 2022년 모두 가치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답이 다수였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60% 이상이 가치동맹으로의 확장을 선호했다. 2022년, 안보동맹을 택한 경향은 60세 이상에서 비교적 뚜렷했다. 60세 이상에서 안보동맹을 택한 비율은 50.7%로 유일하게 절반을 넘었다. 이는 북한을 실질적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11. 출처: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https://missilethreat.csis.org/north-korea-missile-launches-1984-present/>). [그림 5]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핵실험, ICBM, SLBM, IRBM, MRBM 등의 유형별로 나눠 기록한 통계를 이용해 재구성했다. [그림 5]에는 무력도발의 유형과 관계없이 시기별 도발 횟수를 정리했다. 도발 일자를 기준으로 여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는 1회 도발로 간주했다.

또 60세 이상은 2022년 안보, 가치동맹을 택한 비율이 각각 50.7%, 48.3%로 차이가 없었다. 50대 이하에서 다수(최저 62.2%, 최고 69.7%)가 가치동맹으로의 확장을 선호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는 2022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가치동맹 대신에 안보동맹을 택한 비율이 60세 이상에서 2020년 대비 16.3%p(2020년 34.4% → 2022년 50.7%) 늘었기 때문이었다(50대: 2020년 22.7% → 2022년 36.2%=13.5%p).

이념성향에 따른 한미동맹 역할 인식은 2020년에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대체로 가치동맹 확장을 선호한 응답이 많았으나 보수는 안보동맹(33.1%), 진보는 가치동맹(71.6%)을 택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2022년에는 안보동맹을 택한 비율이 2020년 대비 많아졌지만 변화폭은 10%p 내였다. 안보, 가치동맹에 대한 선호가 2020년 대략 3대7에서 2022년 4대6이 되면서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됐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미동맹 역할 인식¹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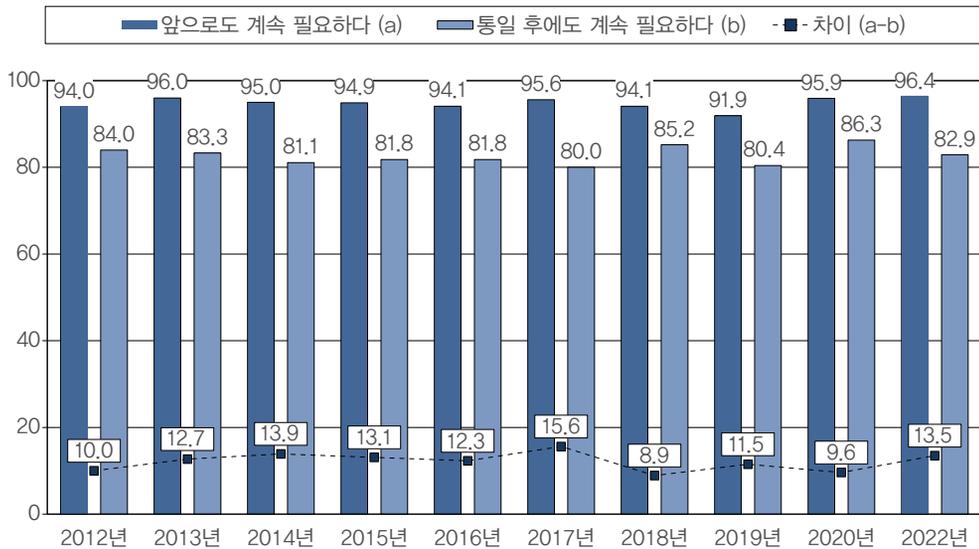
	2020년		2022년		
	안보동맹	가치동맹	안보동맹	가치동맹	
전체	<u>29.0</u>	66.1	<u>38.7</u>	60.1	
연령대	20대	30.0	32.3	65.9	
	30대	25.5	68.2	36.7	62.7
	40대	29.3	66.0	29.3	69.7
	50대	22.7	74.7	36.2	62.2
	60세 이상	<u>34.4</u>	60.0	<u>50.7</u>	48.3
검정값	$\chi^2=13.611, df=8, p<.10$		$\chi^2=29.942, df=8, p<.001$		
전체	29.3	66.9	38.4	60.5	
이념 성향	보수	<u>33.1</u>	65.1	41.9	57.0
	중도	28.8	63.9	38.2	60.4
	진보	25.7	<u>71.6</u>	33.8	65.2
검정값	$\chi^2=18.956, df=4, p<.05$		n.s.		

12. 출처: 아산폴(2020년 12월, 2022년 3월(한미관계)). [표 2]에는 '모름·무응답'은 제외했다.

3.2. 한미동맹의 필요성

미국의 안보 보장, 즉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신되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으로 알아볼 수 있다. 한국인에게 직접 한미동맹이 계속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한미동맹이 필요한지를 ‘향후’, ‘통일 후’로 나눴다는 것이다. 본원은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한국인에게 주요 안보 위협인 북한의 존재를 달리 가정해 한미동맹이 필요한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그림 6] 한미동맹의 필요성: 향후 vs. 통일 후¹⁴ (%)



13.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2014~2020년),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2022년 3월 조사는 문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북한의 남침 시’로 바꿨다. 질문 표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표 3]에 제시한 본원의 조사 결과는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지를 물었다는 점에서 비교가 가능했다. 출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통일외식조사, 2014~2021년). <https://ipus.snu.ac.kr/blog/archives/publishing/4767>(문항: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4.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2012~2020년),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그림 6]에 제시한 수치는 2012~2020년 연례조사, 최근 실시한 2022년 3월 ‘한미관계 조사’ 결과다. 2021년 발표한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보고서의 [표 8]을 그림으로 재구성했다.

앞서 살펴본 바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한국인은 대체로 한미동맹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두 문항 모두에 대다수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2년 이래로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계속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90%대(최저 91.9%, 최고 96.4%)였고, 통일 후에도 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80%대(최저 80%, 최고 86.3%)였다. 북한 변수를 고려해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달리 본 비율은 10% 내외였다. 안보불안 요인인 북한을 고려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향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답이 비교적 적었던 때는 2019년 91.9%였다.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던 시기였다. 당시는 남북 간 긴장이 다소 낮아졌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10명 중 9명은 여전히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만큼 미국에 우호적, 한미동맹에는 신뢰가 높았다는 뜻이다.

3.3. 주한미군의 필요성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주한미군은 북한 등 역내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됐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전시작전권전환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엔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중(對中) 견제 수단으로 보면서 역할 확대 논란도 더해졌다.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중요 이슈가 된 만큼 그에 대한 인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한미동맹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를 향후, 통일 후로 나눠 물었다(그림 7). 직관적으로 가정한 상황별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하는지를 답하게 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동맹이 필요하다는 답에 비해 적었다. 군사, 안보 요인과 직접 연관되는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2년(67.8%)을 제외하면 모두 80% 내외였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늘어 난 2022년에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공감한 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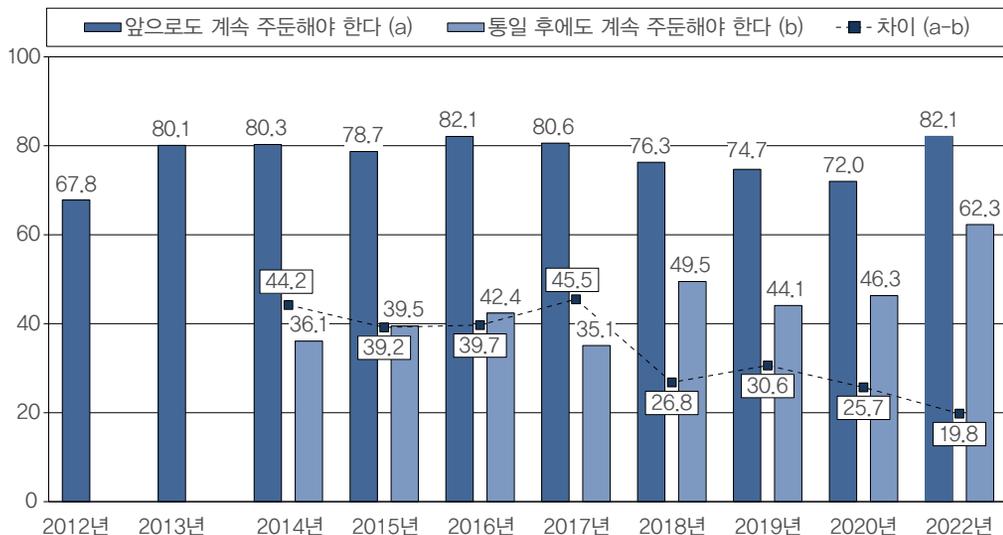
그간 부침이 있었지만,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4년 36.1%에서 2022년 62.3%로 증가세를 보였다. 35.1%로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을 예외로 하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며 한반도 긴장이 낮아진 2018년 이래 2018년 49.5%, 2019년 44.1%로 40%대로 나타났다. 그만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였다. 2019년 이후에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아지며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상승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2022년을 제외하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본 비율은 2014년 이래 절반 미만으로 '향후' 문항에 대한 응답과 차이가 컸다. 이에는 한반도 통일로 북한이란 안보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통일 후 한반도 안보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이므로, 주한미군 주둔이 현시점 대비 절실하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난 셈이다. 또 2018~2020년,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이 40%대였던 점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불거진 동맹 비용분담 논쟁과도 관련 있어 보인다. 당시 방위비분담금협정이 공전하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구심은 커졌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향후, 통일 후를 가정한 응답 격차가 2014년 40%대(44.2%p)에서 2022년 20%대(19.8%p)로 줄었다는 것이다. 향후, 통일 후를 가정한 상황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됐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안보 위협인 북한이 사라져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본 의견이 늘어섰다. 북한 위협 등을 포함한 정세 변화로 역내 질서가 불안정해지면서 주한미군을 안전장치로 삼고 싶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그림 7] 주한미군의 필요성: 향후 vs. 통일 후¹⁵ (%)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연령대, 이념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향후, 통일 후 60세 이상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90.4%, 70.3%로 가장 높았다. 다른 연령대는 향후 70~80%대, 통일 후 50~60%대에 분포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한 응답이 20대에서 84%나 된 점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안보 면에서 보수 성향을 띤 탓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주한미군의 필요성¹⁶ (%)

	향후		통일 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체	82.4	17.6	63.1	36.9
연령대	20대	<u>84.0</u>	16.0	<u>60.5</u>
	30대	77.3	22.7	64.4
	40대	80.3	19.7	61.5
	50대	74.5	25.5	54.6
	60세 이상	<u>90.4</u>	9.6	<u>70.3</u>
검정값	$\chi^2=25.107, df=4, p<.05$		$\chi^2=13.285, df=4, p<.05$	
전체	82.2	17.8	63.2	36.8
이념 성향	보수	<u>90.3</u>	9.7	75.4
	중도	79.0	21.0	60.9
	진보	<u>74.1</u>	25.9	<u>49.1</u>
검정값	$\chi^2=32.086, df=2, p<.05$		$\chi^2=49.624, df=2,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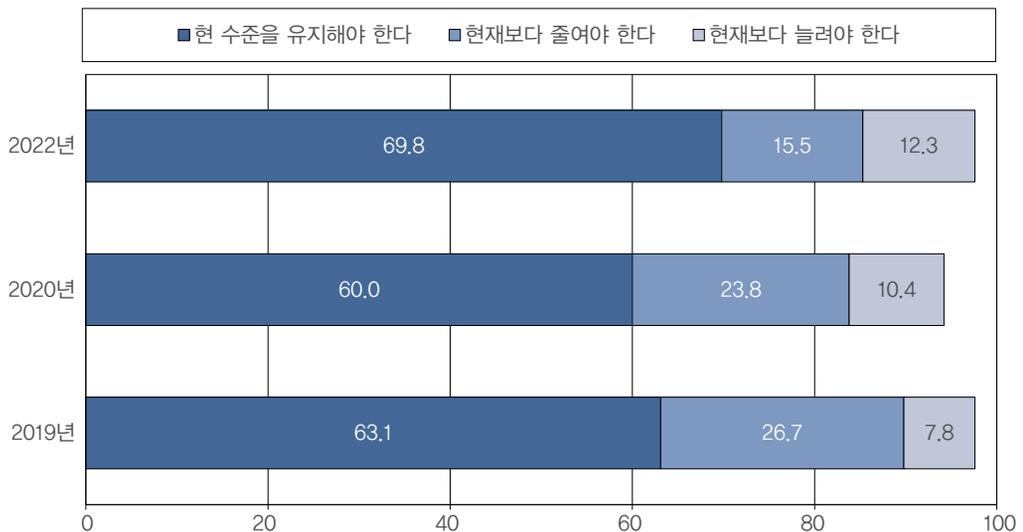
15.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2012~2020년),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16. 출처: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분석에 이용한 문항에 '모름·무응답' 응답은 소수였기 때문에 [표 4]의 교차분석에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했다. 향후, 통일 후를 가정한 문항 사이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의견을 표명한 응답만 분석에 포함했다. 개별 교차분석의 사례 수는 각각 향후 x 연령대 n=998, 향후 x 이념성향 n=958, 통일 후 x 연령대 n=988, 통일 후 x 이념성향 n=952였다.

향후, 통일 후를 가정한 결과에선 연령대별 차이도 살펴봤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60세 이상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이 60.5%, 70.3%로 각각 23.5%p, 20.1%p씩 감소했다. 앞서 주한미군 주둔을 가장 강력히 지지한 두 연령대가 통일 후를 가정했을 때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를 꽤 큰 폭으로 철회했다. 이는 이들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의견은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은 보수, 중도, 진보의 순으로 높았다. 이는 향후, 통일 후를 가정했을 때 모두 동일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한 답은 보수 90.3%, 중도 79%, 진보 74.1%였고, 통일 후는 보수 75.4%, 중도 60.9%, 진보 49.1%의 순이었다. 물론 여기서 진보의 74.1%가 향후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보다 통일 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답은 최소 14.9%p, 최대 25%p 감소했다. 보수, 중도에 비해 진보에서 감소 폭이 컸다(향후 74.1% → 통일 후 49.1%=25%p). 통일 후에는 유일하게 진보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 49.1%, ‘필요 없다’ 50.9%로 나뉘었다.

[그림 8] 향후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의견¹⁷ (%)



17.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2020년), 아산폴(2019년, 2022년 3월(한미관계)).

향후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821명)에게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물었다(그림 8). 현재 2만 8,500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기준으로 향후 그 숫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 물론 다수인 69.8%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그에 대한 의견은 시기별로 달랐다. 2020년 대비 규모를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줄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다.

남북 간 긴장이 비교적 낮았던 2019년, 2020년에 주한미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26.7%, 23.8%였다. 반면, 2022년 이에 동의한 비율은 15.5%에 그쳤다. 주한미군을 늘려야 한다는 답은 2019년 7.8%, 2020년 10.4%, 2022년 12.3%로 차이가 없었다.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의견 중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2년 사이 8.3%p 감소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바뀌어서였다. 즉,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아지며 일부가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의견을 ‘감축’에서 ‘현 수준 유지’로 바꾼 것이다.

3.4. 핵무기에 대한 의견: 핵개발, 전술핵 배치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신뢰와 별개로, 우리는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했으므로 독자 핵무장, 전술핵무기 배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므로 외교적 고립,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없다.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한반도 방어가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는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란 비판도 따른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거래적 동맹관은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에 의문을 키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자산을 대북(對北) 핵 억제에 임시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즉,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핵개발로 한반도는 안보 위협에 처했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 대한 높은 신뢰와 별개로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을 넘었다. 본원은 2010년부터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을 반복 조사해왔다. 2021년 아산리포트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에서도 다뤘듯이 한국인은 대체로 독자 핵무장을 지지(최저 2018년 54.8%, 최고 2022년 70.2%)했다(그림 9).¹⁸

2010년 55.6%, 2016년 59.9%, 2018년 54.8%를 제외하면, 60% 이상이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0년간 소폭의 등락이 있었지만 다수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 점, 핵무장에 동의한 비율이 2022년 70.2%로 최고치를 경신한 점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북한 핵기술이 고도화된 점, 북미대화 결렬로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점, 2022년 북한의 도발이 급증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반대 28.2%, 모름·무응답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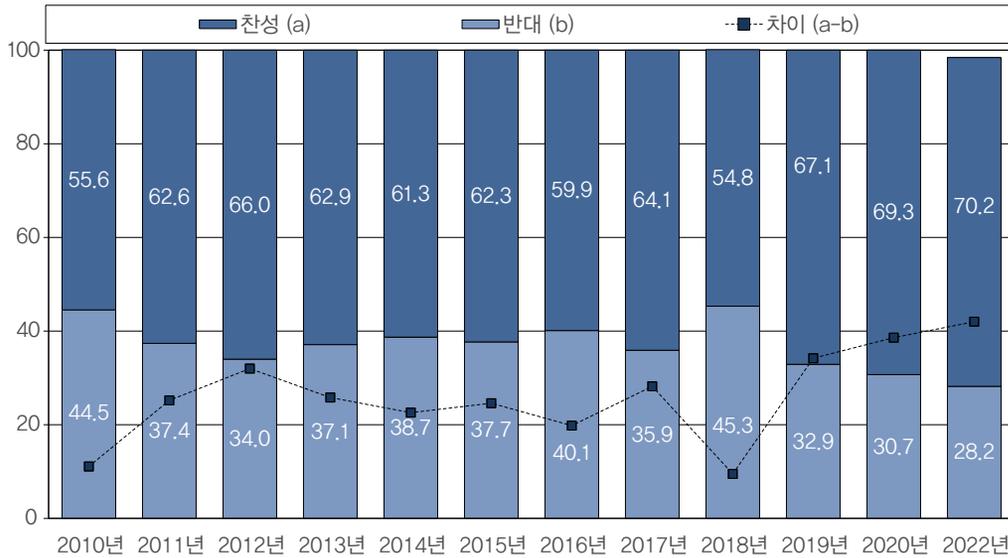
이에 비해, 2010년 이래 자체 핵무장에 반대한 비율은 2022년 28.2%로 최저, 2018년 45.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미정상회담 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2018년에는 반대가 절반 가까이로 늘었지만,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물던 북미대화의 창이 닫히고 비핵화가 요원해진 2022년에는 반대 의견이 최저치가 됐다. 자체 핵무장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봤기에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핵무장 여론도 변했다.

2010년 이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 주목할 점은 찬성(a), 반대(b) 사이 차이(a-b)가 점차 늘었다는 것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반전됐던 때를 제외하면, 찬반 의견차는 2010년대 20%p 내외에서 2019년 이후 30~40%p로 벌어졌다. 특히 2019년 34.2%p(찬 67.1%, 반 32.9%), 2020년 38.6%p(찬 69.3%, 반 30.7%), 2022년 42%p(찬 70.2%, 반 28.2%)로 격차가 커진 것은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닫힌 탓으로 보인다.

그간 핵무장 여론조사는 주로 독자 핵무장에 대한 의견만 물었다. 이번 조사는 후속 문항에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고려해 핵무장에 대한 의견을 다시 답하도록 했다. 즉, 먼저 독자 핵무장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핵개발이 국제사회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서를 주고 의견을 다시 구했다. 조건부 문항을 이용해 독자 핵무장 여론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첫 문항에 국제사회 제재를 고려하고 의견을 낸 응답자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제재 가능성을 강조할 경우 나타날 변화에 주목했다.

18. 출처: 제임스 김·강충구·함건희(2021).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 2010~2020년 아산연례조사 결과. 아산 리포트. 서울: 아산정책연구원(<https://www.asaninst.org/contents/한국인의-외교안보-인식-20102020년-아산연례조사-결과/>).

[그림 9]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견¹⁹ (%)



의견 유보층(모름·무응답)을 제외한 분석(표 5)에 따르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 비율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71.3%에서 언급한 경우 65%로 6.3%p 감소했다.²⁰ 소폭이지만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일부 응답자가 의견을 바꾼 셈이다.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인지 또는 상기하고, 핵무장을 지지했던 이들 가운데 일부가 찬성에서 반대로 이동했다. 연령대는 최소 5.2%p, 최대 8.4%p, 이념성향도 최소 4.6%p, 최대 6.8%p 가량 의견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오차범위 내 변화로 연령대, 이념성향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위의 결과는 독자 핵무장에 한국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널리 알려질수록, 여론 지형이 달라질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만을 가정했으나 제재의 심각성,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핵무장에 따른 국내 시설(예: 폐기물 저장소) 건설 필

19.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2010~2020년),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본원은 독자 핵무장, 전술핵 배치에 대한 국내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동일한 문항을 이용해 핵무장 여론을 파악해 새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발표했다. [그림 9]와 [그림 10]은 2021년 발간한 아산리포트 ‘한국인의 외교안보 인식’에서도 다뤘다. 시기별 분석은 해당 리포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요성과 사회 갈등, ‘핵 공급국 그룹’(Nuclear Supplier Group, NSG) 등 국제 레짐의 핵 연료 공급 차단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 차질 위험 등을 인지할 경우, 한국인은 독자 핵무장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건에 따른 의견 변화보다 중요한 점은 독자 핵무장 여론이 연령대, 이념성향별로 달랐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거나 말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념성향이 보수일수록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다. 연령대별로는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60세 이상 86.4%, 50대 77.1%, 언급한 경우 60세 이상 81.2%, 50대 71%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했다. 40대 이하에서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 응답은 50~60% 초반으로 이보다 낮았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는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언급한 경우 각각 79.4%, 72.8%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다. 대조적으로 진보는 제재 가능성 언급 조건에 따라 각각 58.4%, 53.8%만 독자 핵무장에 동의했다. 보수, 진보 간 차이는 19~21%p였다. 위의 결과는 이념성향과 연령대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이해가 된다. 중도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 비율은 제재 가능성 언급 조건별로 각각 70.6%, 63.8%였다.

20. 독자 핵무장의 문항별(가정형) 응답은 의견 유보층을 포함해도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찬성 70.2% (반대 28.2%)에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 찬성 63.6%(반대 34.3%)로 찬성 비율 감소폭이 6.6%p로 비슷했다. 본원은 2014년 7월(11~13일), 독자 핵무장 여론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조사했다. 당시 조사는 가정형 조건 없이 핵무장에 대한 의견을 묻고, 차례로 한미동맹 약화(“우리나라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한미 동맹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찬성하시겠습니까?”), 원자력 발전(핵무기 개발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과 같은 핵에너지 생산력에 제동이 걸린다고 해도, 찬성하시겠습니까?”), 경제 발전(“국내 핵무기 개발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찬성하시겠습니까?”), 핵발전소 수출(“이명박 전 정부는 UAE와 대규모 핵발전소 건설 계약을 수주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무기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같은 핵발전소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안보상황 영향(“국내 핵무기 개발이 우리나라 안보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찬성하시겠습니까?”)를 가정해 다시 의견을 물었다. 당시 문항은 첫 문항에 찬성한 응답자만 가정형 문항에 답하는 구조였다. 다음은 2014년 조사 결과다. 가정형 조건이 없을 때(1,000명)는 독자 핵무장에 찬성 52.7%, 반대 35.2%였다. 가정형 조건에 따른 결과(527명)는 다음과 같다. 한미동맹 약화 찬성 72.7%, 반대 21.4%, 원자력 발전 찬성 60.8%, 반대 27.7%, 핵발전소 수출 찬성 58.9%, 반대 30.3%, 경제 발전 찬성 51.0%, 반대 42.0%, 안보 약화 찬성 41.7%, 반대 50.0%였다. 조건 없는 첫 문항에 찬성했다가 이어진 가정형 문항에서 반대로 이동한 응답은 안보에 도움이 안 될 때, 경제 발전에 악영향이 있을 때 순으로 많았다. 2022년 3월 조사와는 문항 구조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다. 다만, 여러 가정형 조건에 따른 의견 변화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견: 제재 가능성 언급 여부²¹ (%)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전체	71.3	28.7	65.0	35.0	
연령대	20대	59.3	40.7	50.9	49.1
	30대	58.4	41.6	51.7	48.3
	40대	62.0	38.0	55.9	44.1
	50대	<u>77.1</u>	22.9	<u>71.0</u>	29.0
	60세 이상	<u>86.4</u>	13.6	<u>81.2</u>	18.8
검정값	$\chi^2=67.606, df=4, p<.001$		$\chi^2=13.285, df=4, p<.05$		
전체	70.6	29.4	64.5	35.5	
이념 성향	보수	<u>79.4</u>	20.6	<u>72.8</u>	27.2
	중도	70.6	29.4	63.8	36.2
	진보	<u>58.4</u>	41.6	<u>53.8</u>	46.2
검정값	$\chi^2=34.355, df=2, p<.001$		$\chi^2=25.717, df=2, p<.001$		

다음은 미국 핵자산을 임시로 이용하자는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해 물었다. 전술핵무기 배치를 두고는 앞서 언급한 억지력뿐 아니라 남북 간 전략 균형으로 도발 가능성을 낮출 것 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미국 핵자산을 한반도에 도입하는 만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지만, 주변국으로 핵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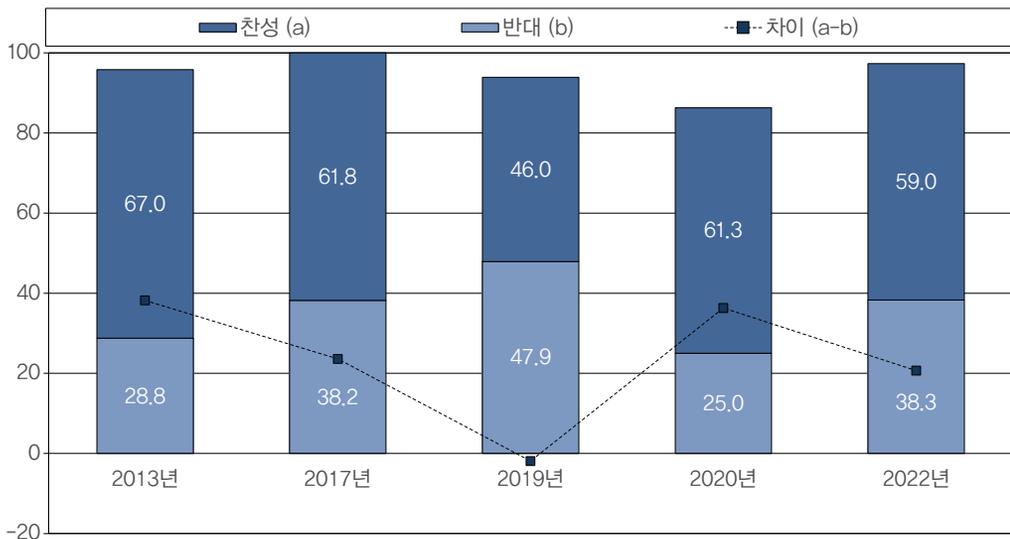
한국인은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를 대체로 지지했다(그림 10). 본원은 2013년부터 총 다섯 차례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다. 2019년(찬성 46%, 반대 47.9%)을 제외

21. 출처: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표 5]에는 '모름·무응답'은 제외했다.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질문에 포함했는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 의견을 표명한 응답만 분석에 포함했다. 개별 교차분석의 사례 수는 각각 제재 가능성 무(無)언급 x 연령대 n=985, 제재 가능성 무(無)언급 x 이념성향 n=946, 제재 가능성 언급 x 연령대 n=980, 제재 가능성 언급 x 이념성향 n=944였다.

하면 60% 내외(최저 59%(2022년), 최고 67%(2013년))가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 찬성했다(반대 최저 25%(2020년), 최고 47.9%(2019년)). 앞서 살펴본 독자 핵무장 지지 비율에 비해서는 10%p 이상 낮았다. 독자 핵무장에 비해 전술핵 배치에 대한 지지가 비교적 낮았던 이유로는 ①1991년 철수한 전술핵을 미국이 실제로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②기본적으로 전술핵이 우리보다는 미국의 자산이란 인식, ③주변국 반발에 의한 갈등과 외교·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 등을 추정해볼 수 있다.

2013~2022년 조사에서 찬반이 비슷하게 나뉘던 2019년을 제외하면 찬성이 반대보다 최소 20.7%p(2022년), 최대 38.2%p(2013년) 더 높았다. 2019년, 유일하게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의견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것은 북미정상회담 후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바뀐 탓으로 보인다. 북핵 위협이 해소된 것처럼 보였던 착시로 인해 전술핵무기 배치에 반대한 비율이 일시적으로 2017년 대비 9.7%p 늘었다(2017년 38.2% → 2019년 47.9%). 이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낮아지며 미국 전술핵 배치에 찬성한 의견도 과거 수준(60%대)으로 상승했다.

[그림 10]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의견²² (%)



22.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2013년, 2017년, 2020년), 아산플(2019년 8월, 2022년 3월(한미관계)).

4. 한미관계의 미래

중국의 부상을 최우선 과제로 정의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을 배제한 채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협력 체 구축에 나서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원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관계에는 북핵 대응, 대(對)중국 견제, 다자협력 등 복잡다단한 변수가 얽혀 있다.

다음에선 한미관계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양국 관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도전과제가 될 만한 이슈에 대한 국내 여론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다자협력(한미일 협력, 쿼드 등), 미사일방어체계(MD, 사드 등) 등에 대해 물었다.

4.1. 한미관계 주요 현안

한미관계의 현재를 진단하기 위해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조사했다(그림 11). 문항은 북한 핵 위협 대처, 무역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중국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동맹 운영, 팬데믹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하고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을 택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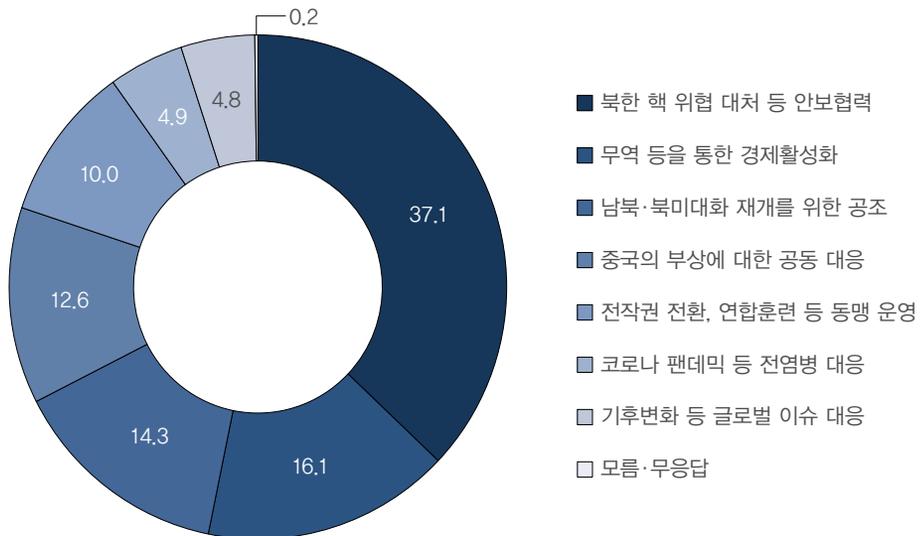
한국인은 한미관계 과제, 즉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에 현실적이었다. 고조된 북한 핵 위협으로 북핵 위협 대처 등 안보 협력을 꼽은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대화의 창이 닫히고, 2022년 들어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영향도 있어 보인다. 한 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응답자는 44.5%가 북핵 위협 대응을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무력충돌 가능성 낮음 30.6%, 보통 40.5%). 한국인은 중국보다 북한에 대한 대응을 우선순위에 뒀다.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역내 동맹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이를 고려해 아시아 전략 내 한국의 역할 설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한 현안은 ‘무역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16.1%,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14.3%,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12.6%, ‘전작권 전환, 연합훈련 등 동맹 운영’ 10%였다. 경제활성화를 제외하면 한미관계에서 안보를 주요 이슈로 보는 시각이 강했다. 그러나 안보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팬데믹·기후변화 대응은 둘 다 5% 이하로 우

선순위에서 밀렸다. 한국인은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이슈보다 북핵 대응 등 전통 안보에서 한미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²³

북핵 위협 대처 등 안보 협력을 꼽은 비율은 이념성향에 따라 달랐다. 보수는 49.5%가 북핵 위협 대처를 시급한 현안으로 본 반면에 중도, 진보에서 같은 답을 한 비율은 각각 31.8%, 24.2%로 이에 미치지 못했다. 과거부터 북한의 도발, 핵 위협 등에 적극 대응을 요구했던 보수의 성향이 여기서도 드러났다. 경제활성화를 현안이라고 한 응답자는 동맹 역할 인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치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는 20.5%가 무역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한미관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안보동맹 9.3%). 이는 북핵 위협 대응(31.1%)을 꼽은 비율 다음으로 높았다.

[그림 11] 한미관계 주요 현안²⁴ (%)



4.2. 한미관계 이슈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높았다. 그만큼 한미동맹을 우리 안보의 초석으로

23.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북핵 문제 등의 대북(對北) 안보 이슈를 주요 현안으로 꼽은 이유로 볼 수 있다.

24. 출처: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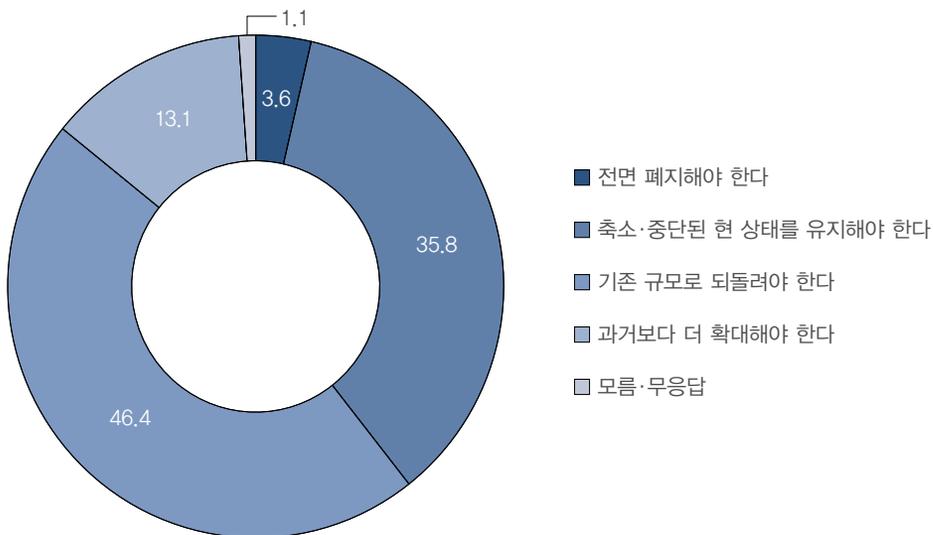
보는 시각이 짙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주국방론을 지지하는 층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대미(對美) 인식과 별개로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미연합훈련, 쿼드, 한미일 협력,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의 순으로 검토했다.

한미연합훈련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다. 해당 기간 훈련 축소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된 탓도 있지만,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은 2018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2022년 한미연합훈련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부의 연합훈련 계획과 별개로, 한미연합훈련 추진 방향을 물었다. 문재인 정부 이전 기존 규모로 되돌려야 한다는 응답이 46.4%로 절반에 가까웠고, 축소·중단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35.8%로 다음이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된 응답이라는 점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 드러났다(과거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13.1%, 전면 폐지해야 한다 3.6%).

[그림 12]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의견²⁵ (%)



25. 출처: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앞서 살펴본 바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의견은 이념성향별로 차이가 났다. 보수는 54.9%가 기존 규모로 되돌려야 한다고 한 반면, 이에 동의한 진보는 35%였다(중도 48.9%). 반대로 진보는 51.7%가 축소·중단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보수는 22.1%만 이에 동의했다(중도 37%). 또 보수는 20.2%가 연합훈련을 과거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진보 5.7%). 즉, 보수층 가운데 상당수는 한미연합훈련을 기존 규모로 되돌리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한 셈이다.

미중전략경쟁: 쿼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에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고수했다. 또 쿼드·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 동참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서였다.

늘어난 북한의 무력도발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조된 안보 위협 인식에 따라, 한국인은 쿼드 참여에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역대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쿼드에 긍정 입장을 보인 비율은 86.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그림 13).²⁶ 이는 앞서 ‘통일 후’ 한미동맹, ‘향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쿼드 참여에 대한 부정 의견은 10.1%에 그쳤다(모름·무응답 3.8%).

쿼드에는 불참 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과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를 고려해 반중(反中) 전선 합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쿼드에 긍정적이었다. 이념성향에서만 일부 차이가 났는데

26. 2021~2022년 쿼드 참여에 대한 지지 여론은 절반 이상이였다. 최근 발표된 다른 기관 조사(의뢰-조사 기관)에 따르면, 쿼드에 대한 여론은 다음과 같았다. 2021년 8~9월(8월 26일~9월 11일)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동참해야 한다’ 51.1%, ‘동참할 필요 없다’ 18.1%, ‘잘 모르겠다’ 30.8%였다(http://www.eai.or.kr/new/ko/project/view.asp?code=99&intSeq=20884&board=kor_poll&keyword_option=&keyword=&more=). 이어 2022년 1월(26~27일)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찬성 52.3%, 반대 47.7%로 나타났다(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2204/FILE_202202031208120180.pdf, htm).

보수는 93.3%가 쿼드에 긍정적이었으나, 같은 답을 한 진보는 77.1%였다(중도 87.4%). 연장선상에서 진보는 20.1%가 쿼드에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보수 4.4%, 중도 8.7%와 큰 격차를 보였다.

한미일 협력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83%였다(부정 15.9%).²⁷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지한 답이 80%를 넘은 데에는 높아진 역내 불안정성 탓도 있다. 한국인 대다수는 북핵 위협,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한미일 협력에는 한일관계 복원이 급선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측면에서도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에 긍정 시각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에는 60세 이상(90.7%), 20대(88.4%)의 순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안보에서 보수 성향을 띤 이들이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에 광범위한 지지를 보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는 90.2%가 한미일 협력을 지지한 반면, 진보는 72.9%만 같은 답을 했다(부정: 보수 9.4%, 진보 26%). 이념성향에 따라 한미일 협력을 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렸다. 이는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한일관계 복원을 강조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미사일방어체계와 사드

한국인은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도 다수가 동의했다. 71.7%가 찬성, 22.8%가 반대했다(모름·무응답 5.5%).²⁸ 미사일방어체계 참여도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이 나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쿼드 참여에 대한 의견차보다 더 컸다. 보수는 84.7%가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

27. 본원은 2014년 이래 총 세 차례 한미일 협력에 대해 조사했다. 2020년 한반도 안보 위협이 다소 낮아진 시기(필요하다 69.4%, 필요 없다 17.4%, 모름·무응답 13.2%)를 제외하고는 2014년에도 84.2%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필요 없다 10.7%, 모름·무응답 13.2%). 이는 2022년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비율과 비슷했다.

28. 2014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조사결과는 찬성 75.4%, 반대 14.6%로 찬반 의견이 2022년 조사와 오차범위 내였다. 당시 조사에서 모름·무응답 비율은 10%였다.

해야 한다고 본 반면, 진보는 56.2%만 이에 동의했다(중도 70.1%).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도 차이가 상당했다. 진보는 38.5%가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반대했고, 같은 의견을 낸 보수는 12%에 그쳤다(중도 24%).

한국인은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안보(위협) 인식별로 의견을 달리했다. 한미동맹이 북핵 대응 등 안보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볼수록(안보동맹 75.7%, 가치동맹 69.6%), 또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수록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찬성했다(높음 78.6%, 보통 79.6%, 낮음 64%).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 안보 위협으로 여길수록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에는 57.7%가 찬성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38.9%로 상당했다.²⁹ 앞서 살펴본 쿼드·한미일 협력·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비해 사드 추가 배치에는 일부가 찬성(긍정)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쿼드·한미일 협력·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는 찬성(긍정)했다가 사드 추가 배치에는 반대한 것이다. 이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갈등으로 큰 홍역을 치렀고,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제 피해를 본 기억이 뚜렷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드 추가 배치는 이념성향, 안보(위협) 인식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³⁰ 보수는 77.9%가 사드 배치에 찬성한 반면, 같은 답을 한 진보는 33.8%에 불과했다. 또 한미동맹을 안보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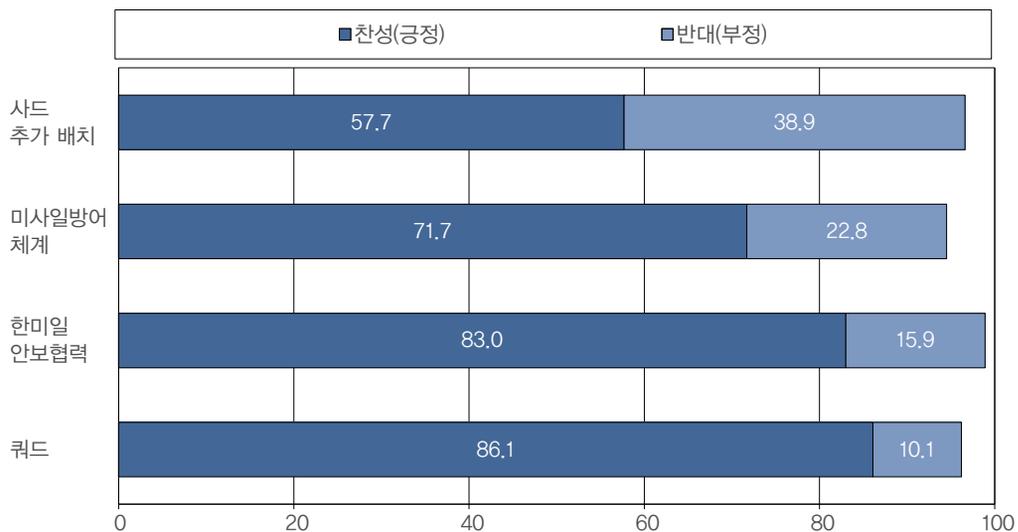
29.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는 20대 대선 국면에서 주로 이뤄졌다. 다른 기관 조사(의뢰-조사기관)에 따르면,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여론은 다음과 같았다. 2022년 2월(5~6일) JTBC-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는 찬성 44.2%, 반대 45.6%, 모름·무응답 10.1%였고(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2203/FILE_202203090111398940.pdf.htm), 2~3월(2월 27일~3월 1일) 서울경제신문-칸타코리아 조사에서는 찬성 50%, 반대 43.9%, 모름·무응답 6.1%였다(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2203/FILE_202203010135185481.pdf.htm).

30. 사드 추가 배치는 경기, 강원, 충청이 후보지로 거론되며 지역마다 반응이 달랐다. 당시 공약은 앞서 거론된 지역의 경제, 군사 위기를 키울 것이라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지역별 사드 추가 배치 여론은 호남(광주/전라, 찬성 35.8%, 반대 59.8%)를 제외하면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다음은 지역별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응답 결과다. 찬반 의견은 각각 대구/경북 72.3%, 22.2%, 강원/제주 62.3%, 32.9%, 대전/충청 61.4%, 35.7%,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8.3%, 38.8%, 부산/울산/경남 56.7%, 40.2%였다. 사드 추가 배치로 후보 지역이 이슈가 됐지만, 의견차는 보수-진보 이념성향 분포와 더 가깝게 나뉘었다. 즉 보수, 진보가 우세한 대구/경북(TK), 호남에서 각각 찬성, 반대가 뚜렷하게 많았다.

로 제한해야 한다고 볼수록(안보동맹 65.9%, 가치동맹 52.4%), 앞으로 10년 내 한반도에 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사드 추가 배치를 지지했다(높음 66%, 보통 69.5%, 낮음 47.3%). 사드 배치를 지지한 답은 연령대별로도 달랐다. 60세 이상 70.5%, 20대 64.7%의 순으로 높았고, 30~50대는 50% 내외에 그쳤다(30대 50.1%, 50대 49.1%, 40대 45.9%).

한국인은 사드 추가 배치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 더 긍정적이었다. 사드가 고고도미사일 방어용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포괄적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잦아진 탄도미사일 위협에 민감해진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의 기술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념성향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높은 지지는 중국이 주장하는 ‘3불(不)’, 즉 추가 사드 배치 배제,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 체계 불참, 한미일 안보협력 금지가 한국인의 일반 정서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3] 한미관계 이슈에 대한 의견³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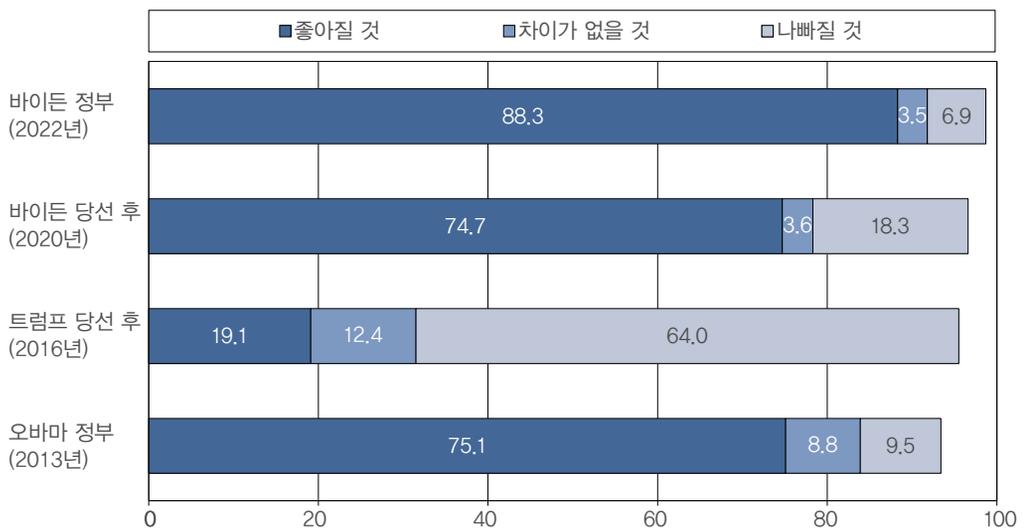
31. 출처: 아산폴(2022년 3월(한미관계)).

4.3. 한미관계 전망

현시점에서 한국인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분석했다. 한국인은 향후 한미관계를 대체로 낙관했다. 과거 2016년 12월 트럼프 당선 후 실시한 조사에서만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다수(64%)를 차지했다. 당시는 트럼프가 대선기간 동안 동맹을 두고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 전망이 불투명해진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실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은 오랜 기간 공전을 거듭하다가 협정 체결 기한을 넘기기도 했다. 이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출범 전후로 동맹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 등을 통해 미국의 국제 리더십 복원을 강조한 만큼 한미관계 전망도 낙관적이었다.

2020년 바이든 당선 후, 한국인은 74.7%가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나빠질 것 18.3%, 차이 없을 것 3.6%). 이는 2016년 트럼프 당선 후 이뤄진 조사에 비해 낙관론이 55.6%p나 증가한 것으로 큰 반전이었다. 트럼프 당선 직후에는 비관론이 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다른 기류가 흘렀다. 2022년, 즉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난 후 이뤄진 조사에서는 긍정 전망이 2020년보다 13.6%p나 늘어 88.3%가 됐다. 이는 한미관계 강화를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조사가 이뤄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한미관계 전망³² (%)



2013년 오바마 정부부터 실시한 네 차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트럼프 당선 후를 제외한 모두에서 한미관계 낙관론이 비관론을 압도했다(2013년 75.1%, 2020년 74.7%, 2022년 88.3%). 바이든 당선 직후인 2020년 12월,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답은 오바마 정부 때와 비슷했고, 2022년 3월에는 그보다 더 높았다.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한미관계를 낙관했다. 그만큼 한국인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

[표 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한미관계 전망³³ (%)

	2020년		2022년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전체	77.3	19.0	89.5	6.9	
연령대	20대	72.3	23.5	89.4	8.8
	30대	64.1	32.0	91.8	6.8
	40대	75.4	22.3	85.6	9.0
	50대	<u>82.6</u>	14.9	88.1	6.7
	60세 이상	<u>85.1</u>	9.8	91.9	4.7
검정값	$\chi^2=40.656, df=8, p<.001$		n.s.		
전체	76.9	19.5	89.5	7.0	
이념 성향	보수	75.8	20.9	<u>94.1</u>	4.2
	중도	78.0	18.0	86.8	8.4
	진보	76.9	19.6	84.6	<u>10.3</u>
검정값	n.s.		$\chi^2=18.999, df=6, p<.05$		

32. 출처: 아산폴(2013년 10월, 2016년 12월, 2020년 12월, 2022년 3월(주변국 인식)).

33. 출처: 아산폴(2020년 12월, 2022년 3월(한미관계)). 한미관계를 낙관, 비관적으로 전망한 응답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표 6]에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했다. 또 '차이가 없을 것'은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개별 교차분석의 사례 수는 각각 2020년 x 연령대 n=968, 2020년 x 이념성향 n=942, 2022년 x 연령대 n=985, 2022년 x 이념성향 n=987이었다.

한미관계 전망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났다(표 6). 2020년에는 연령대, 2022년에는 이념성향별로 한미관계 전망이 엇갈렸다. 바이든 당선 직후인 2020년 12월에는 50대 82.6%, 60세 이상 85.1%가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40대 이하가 60~70%만 한미관계를 낙관한 것과 대조된다. 2020년 연령대별로 차이가 났던 한미관계 낙관론은 2022년, 모두 90% 내외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대다수가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

이념성향별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모두, 70% 중후반이 한미관계를 낙관했다. 이는 한미관계 전망이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비슷했다는 뜻이다. 반면, 2022년에는 보수가 한미관계를 낙관하는 비율이 94.1%로 매우 높았다. 이와 달리, 진보는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본 응답이 10.3%로 보수(4.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중도 8.4%). 앞서 미국, 한미동맹 등에 대한 인식이 이념성향에 따라 엇갈린 탓에 한미관계 전망도 달랐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보수에서 미국 호감도가 높고, 한미동맹 인식이 긍정적이었던 앞선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5. 나가며

본원은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2022년 3월, 한미관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한미 동맹 재건, 전략동맹 강화를 천명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인은 주변국 중 미국에 가장 우호적이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한미동맹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대미(對美) 정서는 과거 한때 미국, 주한미군 관련 이슈(사건)로 악화된 적이 있었지만, 이슈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시적이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주요 조사 결과다.

첫째, 2022년 한국인의 대미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한국인은 ‘미국’을 막강한 군사력과 연관 지었고, 한미관계 중요 사건으로 한미동맹 체결 등 주로 안보 이슈를 꼽았다. 그간 군사, 안보 등이 양국 관계의 근간이 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한미 FTA 체결, 1945년 한반도 해방 등 긍정 사건을 떠올리는 경향도 두드러졌다.

미국이 군사 대국이란 점에서 미국을 군사력과 연관 지은 한국인의 응답은 임의적이지 않다. 한미관계 주요 사건으로 6.25 전쟁을 꼽았는데, 이는 응답자의 역사 인식에 따라 그 시각이 엇갈렸다. 보수, 진보에서 모두 미국을 6.25 전쟁과 연관 지은 비율이 높았던 점은 이를 방증한다. 또 연령대, 이념성향별로 한미관계 주요 사건을 다르게 꼽은 결과는 정부의 대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둘째, 2010년 이래 한국인의 대미 호감은 높은 편이었다. 이는 거래적 동맹관으로 한국을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동일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동반 상승했다. 그러나 2022년 3월,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가 일정 수준 차이를 보인 점은 주목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주창한 윤석열 정부에는 우호적 대미 여론 형성이 중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점은 고무적이다.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전략동맹 확장을 위한 대외정책 추진 단계에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가 연령대, 이념성향별로 격차를 보인 점은 유의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은 주변 정세에 따라 한미동맹의 역할을 다르게 봤다. 물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앞서 살펴본 높은 대미 호감이 양국 간 동맹을 가치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안보 위협이 높았던 때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동맹을 더 강조했다.

대체로 한미동맹의 역할 확장에 공감했으나, 한반도 정세에 따라 동맹의 역할을 달리 본 점은 유의할 대목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도발로 안보 위협이 증가했을 때는 미국의 안보 보장 역할을 중요시했다. 향후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이는 과정에서 북한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즉, 한국인은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이 담보될수록 한미동맹의 역할 확장을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는 한국인의 신뢰가 높았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는 평도 있었지만, 대다수 한국인은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이 우리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를 물었을 때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향후, 나아가 통일 후를 가정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고 봤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향후, 통일 후로 나눠 물었을 때 그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보든 그렇지 않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한 이들이 다수였다. 북한이 사라져도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답한 데는 중국의 부상 등으로 역내 질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역내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시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내 한국의 역할과 맞닿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섯째,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와 별개로 한국인은 독자 핵무장, 전술핵 배치도 지지했다. 북한의 핵기술 고도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 간 긴장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시기를 제외하면 다수가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에 찬성했다.

미국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중국의 압박, 주변국으로의 핵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핵무장을 지지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일부만 핵무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점도 중요하다. 이는 높아진 역내 불안정

성에 더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개입을 피한 점 등을 고려해 핵무장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본 측면도 있어 보인다.

여섯째, 한국인은 2022년 한미관계 현안에 현실적 고려를 했다. 북핵 위협에 맞서 북핵 위협 대처 등 안보 협력을 택한 답이 가장 많았다.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협상의 창이 닫히고 지난 2년간 북한의 무력도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도 긍정적이었다. 쿼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고,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도 찬성했다. 사드 추가 배치에는 그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한미일 협력은 한일관계 개선이 선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여론이 중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단기간 내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자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엔 한일관계 변화에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의 중재 역할과 야당의 정치적 지위,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관계 개선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다.

한국인의 한미관계 전망은 낙관적이었다.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새 출발점에 서게 될 양국 관계에 높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우호적 대미 여론은 한미관계 강화에 힘을 실어줄 요인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대미(對美) 여론은 한순간, 특정 이슈에 의해 요동칠 수 있다. 또 미군 장갑차 사건,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 등에서 봤듯이 한번 악화된 대미 정서의 여파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내 동맹의 역할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새 정부는 한미관계 강화를 대외정책의 중심에 두고, 양국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있어 신속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때 정부 당국은 대미 여론의 변동성을 고려해 현안을 섬세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조사방법

아산정책연구원 아산폴 조사개요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13년 5월 23~25일, 10월 10~12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4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14년 3월 13~15일, 7월 11~13일(핵무장)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15년 3월 11~1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16년 10월 10~12일, 11월 22~24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9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19년 1월 7~9일(주한미군), 8월 19~21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2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20년 12월 28~29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2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 인터뷰 조사
 조사기간: 2022년 3월 10~12일(한미관계), 17~18일(주변국 인식)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조사 조사개요

201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개별 방문 면접조사
 조사기간: 2010년 8월 16일~9월 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1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19\%$ 포인트
 조사방법: MMS(Mixed-Mode Survey): 전화면접 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1년 8월 26일~10월 4일

실사기관: 엠브레인

2012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2년 9월 24일~11월 1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3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3년 9월 4~2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4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4년 9월 1~17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5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5년 9월 2~30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6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6년 9월 9일~10월 14일
실사기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2017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7년 10월 19일~11월 14일
실사기관: 칸타퍼블릭

2018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8년 11월 8일~12월 5일
실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2019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8\%$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19년 12월 4~24일
실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

2020년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2.53\%$ 포인트
조사방법: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구축 후,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0년 12월 3~17일
실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부록 1: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 한미관계 조사

문1. 선생님께서는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응답	비율 (%)
막강한 군사력(한미동맹 등)	37.3
자본주의 경제	31.4
민주주의 정치체제	17.2
혁신적인 기업(애플, 구글 등)	7.5
영화, 팝 등 대중문화	2.6
유명 인사 및 관광지	2.4
기타/모름·무응답	1.7

문2. 선생님께서는 140년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응답	1순위	2순위
6.25 전쟁	35.8	21.8
1953년 한미동맹 체결	23.3	25.3
1945년 남북분단	13.6	13.6
한미 FTA 체결	12.6	19.6
1945년 한반도 해방	10.1	13.9
2008년 광우병 사태	3.6	5.1
기타/모름·무응답	1.0	0.7

문3. 선생님께서는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십니까?

응답	비율 (%)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60.2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동맹으로 한정해야 한다	38.8
모름·무응답	1.1

문4. 선생님께서는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북한 핵 위협 대처 등 안보협력	37.1
무역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16.1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14.3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동 대응	12.6
전략권 전환, 연합훈련 등 동맹 운영	10.0
코로나 팬데믹 등 전염병 대응	4.9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4.8
모름·무응답	0.3

문5.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그렇다	53.4
어느 정도 그렇다	35.5
별로 그렇지 않다	8.6
전혀 그렇지 않다	2.0
모름·무응답	0.5

문6~7. 선생님께서는 한미동맹이 [앞으로도/통일 이후에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향후	통일 후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4.5
별로 필요하지 않다	2.2	11.7
어느 정도 필요하다	33.9	45.6
매우 필요하다	62.5	37.3
모름·무응답	0.1	1.0

문8~9. 선생님께서는 주한미군이 [앞으로도/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	향후	통일 후
매우 그렇다	42.3	23.2
어느 정도 그렇다	39.9	39.1
별로 그렇지 않다	13.4	23.8
전혀 그렇지 않다	4.0	12.7
모름·무응답	0.4	1.3

문10.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 8,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n= 821)

응답	비율 (%)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	15.5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69.8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	12.3
모름·무응답	2.4

문11. 선생님께서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긍정적이다	38.5
대체로 긍정적이다	44.5
대체로 부정적이다	10.5
매우 부정적이다	5.4
모름·무응답	1.0

문12.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32.0
찬성하는 편이다	38.2
반대하는 편이다	18.4
매우 반대한다	9.8
모름·무응답	1.5

문13. 독자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를 고려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기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21.3
찬성하는 편이다	42.3
반대하는 편이다	22.1
매우 반대한다	12.2
모름·무응답	2.1

문14.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20.5
찬성하는 편이다	38.5
반대하는 편이다	23.8
매우 반대한다	14.5
모름·무응답	2.6

문15. 선생님께서는 한미연합훈련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전면 폐지해야 한다	3.6
축소, 중단된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5.8
기존 규모로 정상화해야 한다	46.4
과거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13.1
모름·무응답	1.0

문16.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긍정적이다	35.5
대체로 긍정적이다	50.6
대체로 부정적이다	7.0
매우 부정적이다	3.1
모름·무응답	3.8

문17. 선생님께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25.6
찬성하는 편이다	32.1
반대하는 편이다	21.2
매우 반대한다	17.6
모름·무응답	3.4

문18.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매우 찬성한다	21.6
찬성하는 편이다	50.1
반대하는 편이다	16.8
매우 반대한다	6.0
모름·무응답	5.4

문19. '전혀 가능성이 없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가능성이 높다'를 10으로 했을 때, 향후 10년 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비율 (%)
가능성이 낮다	48.4
보통이다	25.7
가능성이 높다	23.3
모름·무응답	2.5

부록 2: 2022년 아산정책연구원 주변국 인식 조사³⁴

문1~2. 선생님께서는 [미국/중국]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갖고 계십니까?

문5~6. 선생님께서는 [바이든 대통령/시진핑 주석]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갖고 계십니까?
(0~10점)

응답	호감도 평균
미국	6.85
중국	2.71
바이든	5.89
시진핑	1.99

문13~17. 선생님께서는 향후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중국/북한]의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질 것으로 보십니까? (%)

응답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좋아질 것	88.3	62.2	37.9	24.6	23.4
차이가 없을 것	3.5	5.1	3.4	4.1	3.8
나빠질 것	6.9	31.6	56.8	68.5	68.9
모름·무응답	1.3	1.1	1.9	2.8	3.9

34. 2022년 3월 실시한 주변국 인식 조사에서 본문에 인용한 조사결과만 부록에 제시했다.

ASAN REPORT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발행일 2022년 5월

지은이 제임스 김, 강충구, 함건희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131-7 95340 (PDF)



ISBN 979-11-5570-131-7